

초과세수 미래기금에 넣으면 전남광주 교부세 1.5조 줄어

전국서 경북 다음으로 감소 커...지방재정 타격 예고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올해 법정 정산은 보장해야”

올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경우 전남광주특별시장의 교부세 감소액이 1조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추가세수뿐 아니라 올해 초과세수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지방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6년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 금액 분석’에 따르면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은 10조8000억원이며 이 중 보통교부세는 10조4885억원, 특별교부세는 3244억원에 달한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정 대비 63조2000억원, 내국세는 56조2000억원이 증가한다는

‘2026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다.

이 세수 증가분을 전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면, 이 재원을 지방정부에 추가로 교부하지 않게 된다. 기존 교부액의 삭감이 아니라 현행법 유지 시 받을 정산액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올해 재정부족액과 기존 배분구조를 적용한 시도별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경북 1조6792억원, 전남 1조3359억원, 경남 1조2012억원, 강원 1조1110억원 등의 순이며 광주는 2001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배정될 보통교부

세의 감소 추정액은 총 1조5360억원이다.

이는 광역 본청과 관할 기초단체를 합산한 추정치이며, 실제 정산액은 배분 시점의 산정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 조세수입인 초과세수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처리해 기금에 전출하는 것이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특정 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기준 예외와 달리 국가와 지방, 현재와 미래 사이의 재원배분을 변경하는 정책 결정이기 때문이다.

또 재정적 측면에서 “세입을 적게 예측할수록 중앙정부가 기금에 적립할 재원이 커지는 구조는 정확한 세수추계의 유인과 충돌한다”며 “동일한 실제 징수액에도 당초 예측치에 따라 교부세가 달라지는 것은 결산 정산 원칙과 교부세의 간접징수 성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초과세수는 현행 법체계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제상환 등에 활용하고, 교육교부금 개편은 별도 법 개정으로 구분해 추진해야 마땅하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치적 측면에서도 “내년은 지방선거로 출범한 지방정부가 공약과 비전을 본연으로 실현하는 첫 해”이라며

“내국세가 40%가량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부세 증가가 약 2%에 그치는 데다 올해 초과세수 정산까지 제외하는 것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세수 적립을 논의하더라도 올해 초과세수의 법정 정산은 중앙·지방 간 타협의 최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자체별 정산액과 제도 변경에 따른 감소액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구레스토어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지역사회 거버넌스 모델 확대 정부 적극 지원”

구례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현장 살펴

주민 의견 청취...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례도 공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구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구례군은 지난 6월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된 7개 군 중 한 곳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주민 2만4000여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와 주민들의 기대를 청취했다.

먼저 주민의 사용자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읍·면을 별도 생활권으로 운영하는 지역의 사용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했다. 또 2028년 분사전 전환 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국비 분담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고, 향후 추가 공

모에선 지역 간 재정 여건의 차이가 사업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 추가 재원 투입에 따른 가점 항목 등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어 유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승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등은 구례 ‘구레스토어’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례를 공유했다.

구레스토어는 지역 점포와 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공간이다. 관광객·주민·창작자와 교류하며 지역 소비와 공동체 활동을 연결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곳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운영 사례를 살폈다. 또한 구례에

서 생산한 밀을 가공하는 우리밀가공공장을 찾아 생산·유통 현황을 살폈다.

1993년 설립된 이 공장은 연간 1800t의 밀을 가공하며, 생산한 밀가루 일부를 지역 베이커리와 식당 등에 공급하고 있다. 지역 베이커리에서 만든 우리밀 빵은 구레스토어 등에서 기본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구례군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구례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모델이 기본소득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지속되도록 정부도 밀착적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구례=이민구 기자 mingu992@gwangnam.co.kr

엠코 “광주사업장 투자, 책임 있게 추진”

폐수처리 해법에 “큰 힘 됐다” 공식 서한

반도체 후공정 기업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광주사업장 대규모 추가 투자의 결실로인 폐수처리 문제에 해법을 마련해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감사 공문을 보냈다.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엠코는 지난 22일 이전 대표이사장 명의로 민형배 사장에게 ‘광주사업장 추가 투자 관련 폐수처리 지원에 대한 감사’ 공문을 보냈다.

엠코는 공문에서 특별시와 장성군이 ‘반도체 폐수처리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가 폐수처리 용량 확보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데 대해 “적극적인 지원은 당사 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사업장 투자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폐수처리시설 확충과 관련 인허가, 운영방안에 관한 후속 협의에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엠코는 당초 2035년까지 1조90억

원을 투자해 광주사업장에 공장 6개동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반도체 수주 증가로 수조원의 투자 확대를 추진하면서 폐수처리가 예기 않은 난제로 떠올랐다.

기존 폐수를 처리하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사실상 한계에 이르러 증설 이후 늘어날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해법 마련에 애를 먹던 엠코 측은 지난 16일 통합시에 지원을 요청했고, 시는 17일 장성군과 긴급 협의한 뒤 18일 업무협약을 전격 체결했다. 요청이 들어온 지 하루 만에 정성공공폐수 처리시설과 연계한 처리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민 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엠코의 공식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투자가 막히는 곳이 있다면 행정이 빠르게 풀어내겠다”며 “폐수처리 기반 확충과 인허가·운영방안 등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권 3곳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전

행암·화정·오룡동 일원...29일까지 주민·기업 의견 수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남구 행암동과 서구 화정동, 북구 오룡동 등 3곳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거치지 않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저장·소비하는 일종 규모 이하 시스템이다.

시는 이들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주민·기업 등의 의견을 받는다.

신청 유형은 동일 발전소 또는 생활권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으로, 정부가 지난 6월 새로 도입한 특화지역 유형이다. 동일 발전소 또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소비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연계해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에너지 자립과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암동·오룡동은 옛 광주시 시절인 지난해에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정부 후보지역 선정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도전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심사해 후보 지역을 선정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분산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옛 전남에서는 해남·영암 지역이 지난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와 에너지 신사업 관련 규제 특례 적용 등이 가능하다.

양동민 기자 yang00@

▶1면 ‘광양만권’서 계속

무엇보다 세풍산단 염폐수 처리시설 확충과 광물 비축창고 기반구축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화단지 지정은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생산시설 확충과 함께 장비·부품 등 연관기업의 집적이 가능해지고, 신규 일자리와 지역 내 소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철강·화학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을 연계할 경우 광양만권이 보유한 항만과 산업단지, 에너지·물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산업 전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번 지정으로 광양만권은 대한민국 배터리 공급망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거점이 됐고, 이제 특화단지라는 이름에 걸맞는 실질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싶고 기술과 인재가 모이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광양만권을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軍·유엔사 “北지뢰도발·정전협정 위반”

우리 군과 유엔사가 30일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이 있었으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북한은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는 우리 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 향후 북한의 사과나 시정 조치 등을 이끌어내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대북 입장 발표를 통해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우리 군 장비 2명에게 중상을, 1명에게 경상을 입힌 DMZ 폭발 사고가 북한군 지뢰에 의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하고, 그 원인이 된 국경선 요새화에 책임을 돌은 것이다.



강 본부장은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도 했다. 북한이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촉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군사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 유엔사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엔사는 한국군과의 DMZ 폭발 관련 현장조사 중 발견된 MDL 이남 북한 지뢰 1발을 거론하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누리호 7일 우주로...5차 발사 막바지 준비

3단 결합 완료...6일 발사대 이송·기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를 일주일 앞두고 3단 연결과 전자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총조립과 주요 시험을 마친 뒤 내달 6일 발사대로 옮겨져 기립하며, 최종 점검을 거쳐 7일 낮 12시 23분 우주로 향해 날아오를 예정이다.

3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진 등 작업자들은 추석 연휴 전까지 3단부 페어링 작업을 마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1·2단과 3단부를 연결하는 총조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 조립이 완료되면 발사체 내부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점검이 이어진다.

주탑제위성도 지난달 31일과 이달 3일

발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숙지하는 훈련인 ‘드라이런’도 두 차례 수행했으며 발사일이 포함된 10월 첫 주 마지막 드라이런을 거치게 된다.

누리호가 발사대로 오르기 전날인 5일에는 누리호를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싣는 작업을 하루 간 진행한다.

6일에는 조립동으로부터 1.8km 떨어진 발사대로 누리호를 옮긴 후 발사체를 기립하는 장치인 이력터를 사용해 누리호를 발사대 위에 세우게 된다.

이후 누리호에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탱크 역할을 하는 ‘임빌리칼 타워’에 연결해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발사체 기능도 함께 점검한다.

발사 운용이 시작되는 7일에는 추진제 충전을 위한 점검과 헬륨 충전을 거치게 된다. 5차 발사는 자정 넘어 이뤄졌던 4차 발사보다 12시간 빠른 낮 12시 23분으로 예정된 만큼 발사 준비와 운용을 시작하는 시간 모두 이른 시간으로 당겨질 전망이다.

연합뉴스